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일~3월 31일

| 대내경제

| 대외경제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일~3월 31일

대내경제 103

<식량 및 인구>

FAO, 북한식량 부족국가 지정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시장>

비법적 부동산 시장 확대
전자카드 개발 및 사용 확대
북한 당국, 가격관련 정보 유출 통제

대외경제 105

<대북제재>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연장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기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과 외화벌이

<대북지원>

유엔, 대북지원 중단 발표
국제적십자사, 태풍 수해 복구사업 완료

<북중관계>

대중 수출액 급감
중국, 북한과 새로운 무역특구 추진
북한, 외화벌이 위해 인력송출 모색

부문별 주요 기사

3월 1일~3월 31일

대외경제 105

<북러관계>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추진
러, 북한과 2억 6천만 달러 교역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대내경제

<식량 및 인구>

RFA(3.5), 중앙일보(3.15)

FAO, 북한식량 부족국가 지정

FAO가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8년 1분기 보고서는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7개 식량부족 국가군 중 하나로 지정함. 지난해 봄 가뭄으로 쌀 농사가 타격을 받아 식량 부족량이 약 46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 홍수와 가뭄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고 농기계와 비료가 부족한 것은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북한의 인구구조 변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발표한 팩트북(Factbook)의 통계에 따르면 북한 인구와 평양 인구는 3년 사이 각각 39만명과 2만명 가량 증가하였음. 북한 전체 인구 증가율이 1.6%인데 반해 평양 인구는 0.7% 증가한데 그쳐, 일각에서는 평양의 출산률이 지방보다 낮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연령별 인구 구조 측면에서는 아동기(0세~14세) 비율은 21.5%에서 20.78%로 낮아지고, 중위연령은 33.4세에서 34세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기대수명은 68.8세에서 70.7세로 늘어났음.

<시장>

데일리NK(3.7), RFA(3.12)

비법적 부동산 시장 확대

당국의 암묵적 허가 아래 방침을 받아 진행되는 합법적인 건설이 아닌 개인이 토지를 매매하여 주택을 짓고 파는 비법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임. 북한에서 부동산 매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높은 수익성으로 돈주들에게 각광을 받으면서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이 개인 소토지를 파는 등 토지 및 주택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국가는 수익금을 챙기고, 주민들은 건설 현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음.

전자카드 개발 및 사용 확대

조선무역은행이 2010년 '나래카드'를 발급한 이후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거나 개발 중인 전자카드는 최소 20여 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짐. 은행이 발행하는 직불카드 외에도

지하철 이용과 주유,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에 사용되는 카드 등 종류가 다양함. 당국은 전자카드 사용을 통한 ‘경제 강국의 건설’과 ‘인민 생활의 향상’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의 경제구조와 통치체계를 고려할 때, 현금 회수용과 주민 감시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됨.

북한 당국, 가격 관련 정보유출 통제

양강도의 소식통에 의하면 최근 북한 당국이 불법 밀수, 비디오 등에 대한 검열을 강화했으며, 특히 쌀값에 대한 정보는 ‘국가기밀’이라며 누출하는 사람에 대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고 전함. 이와 같은 내용은 조선사회주의여성동맹의 강연회에서 언급되었으며, 북한 당국이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강력히 차단할 것이라는 해석임.

대외경제

<대북제재>

RFA(3.30), VOA(3.2, 3.17, 3.20, 3.27, 3.28, 3.29), 뉴데일리(3.14, 3.17, 4.1), 연합뉴스(3.2), 조선일보(3.28), 중앙일보(3.17, 3.20, 3.28)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활동임기를 2019년 4월 24까지로 1년 연장함. 미국, 한국,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출신의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들의 각종 대북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지금까지의 활동 사례로 패널은 북한 미사일 기술자들이 2008~17년 3월 기간에 시리아의 미사일 기술을 지원했다고 연례 보고서를 통해 밝힌바 있음. 또한 전문가 패널은 2017년 1월~8월 5일에 발생한 북한 석탄 수출입 사례 30건을 심층 조사한 결과 북한이 중국, 러시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으로 석탄을 수출했으나 제대로 보고된 것은 말레이시아 1건에 불과하여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위반했다고 발표함. 이와 함께 북한이 지속적으로 우회 경로를 이용한 항해, 원산지 위조, 제 3국을 통한 환적, 선박 자동식별장치(AIS) 조작 등을 통해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함.

미국의 대북제재 강경기조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대북제재 이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개정함. 개정된 규정을 통해 미국은 미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곳에 북한 노동당의 재산과 이권 모두를 차단하고,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인들의 대북거래를 금지한다고 밝힘. 구체적으로 거래 통제가 시행될 분야는 북한과 관련한 행정 실무 및 절차, 항공기, 금융, 자산 차단, 외교 공관, 외국 서비스, 비정부기구, 특히, 서비스, 통신, 유엔, 선박 등 16개 분야임. 미국 해안경비대(USCG) 또한 북한과 연관된 것으로 파악되는 300t 이상의 선박 218척을 제재 목록에 올려 지속적으로 감시 중에 있으며, 이 감시 선박 명단은 해안경비대 홈페이지를 통해 매달 공개되고 있음.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는 북미교역 동향에서도 나타나고 있음. 무역 통계상으로 201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북한과 미국 간에 교역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남. 마지막으로 교역이 있었던 2017년 1월에 북한의 대미 수입액은 총 2천 660달러 규모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과, CD, 테이프 등의 품목이 전부였고, 수출액의 경우 0을 기록함. 2017년 전체 북미 무역액은 2016년의 13만 9천 334달러에 비해 98%나 감소한 수치임.

북한 해외 노동자 송출과 외화벌이

베트남은 대북제재 2371호와 2375호 통합 이행보고서에서 2017년 9월 11일부로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승인 하지 않고 있으며, 재발급도 중단했다고 보고함. 싱가포르도 대북제재 2397호 이행보고서를 통해 북한 국적자의 노동허가를 전면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힘. 인도네시아의 경우도 이행보고서에서 자카르타 주재 북한대사관 직원 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함.

한편 북한은 해외 노동자 송출뿐만 아니라 외교공관 불법 임대사업을 통해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불가리아, 독일, 폴란드, 루마니아 국가를 지적한 바 있음. 이에 불가리아 정부는 북한대사관을 임대하고 있는 사업체에 계약 중단을 요구했으나, 평양 주재 자국 대사관 이용과 관련해 북한 측과 상호 협정을 맺어 상황이 복잡하다고 해명함. 독일은 북한이 대사관과 대사관 부지를 임대해 유스호스텔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했으나, 관련 회사들이 계약 파기를 거부하여 현재 독일 중앙 세관국이 법적 절차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힘. 반면 폴란드는 대사관 부지를 임대한 9개 기업 중 8개가 계약을 파기했고, 나머지 1개 기업도 곧 계약을 해지할 것이라고 설명함. 이어서 폴란드 정부는 향후 북한 대사관 주소지를 둔 기업들은 사업체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대북지원>

RFA(3.27), VOA(3.16, 3.20, 3.31), 동아일보(3.31), 연합뉴스(3.13), 중앙일보(3.31)

유엔, 대북지원 중단 발표

유엔이 북한에 대한 중앙긴급구호기금(CERF) 지원을 11년 만에 중단함. 중앙긴급구호기금은 인도주의적 구호 활동 예산이 매우 부족한 나라에 지원되는 것으로, 북한은 2007년 이후 매해 이 기금을 지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기금 지원 중단에 대한 이유로 유엔은

대북 제재에 따라 은행의 대북 송금이 차단되어 올해 북한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고 설명함. 이와 함께, 에이즈, 결핵, 말라리아 3대 질병에 대해 기금을 조성해 배분하고 감독하는 ‘에이즈와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B and malaria)’도 북한 내 자원 배치와 효율성, 투명성에 대한 문제로 대북 지원금을 중단함. 북한은 10만 명 이상의 결핵 환자들이 이 기금으로부터 약을 지원 받고 있었으나, 대북 지원이 중단되면서 향후 북한 주민들의 보건상태가 우려되는 상황임.

국제적십자사, 태풍 피해 복구 사업 완료

국제적십자사(IFRC)는 ‘긴급구호 사업 최종 보고서: 북한 함경북도 홍수(Emergency appeal final report)’를 통해 2016년에 시작된 북한 수해 복구 사업이 완료 되었다고 밝힘. 모금 부진으로 전체 목표액의 33%에 불과한 예산인 약 500여 만 달러로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14만 명의 군인과 23만 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피난민들을 위한 쉼터 마련, 비상식량 및 정수기 배포를 중심으로 사업을 펼쳤다고 보고서는 설명함.

<북중무역>

VOA(3.28), 뉴스1(3.3), 연합뉴스(3.6), RFA(3.2, 3.5)

북한 대중 수출액 급감

한국무역협회의 ‘북-중 교역자료’에 따르면 2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885만 3천 520달러로 전달인 1월의 3천600만 달러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1천만 달러 이하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수출 규모가 억단위로 증가하여 2016년까지 월 평균 수출액은 2억 달러에 달했었는데, 지난해 중국이 국제사회 대북제재에 본격적으로 동참하면서 10월부터 1억 달러 선이 무너졌고, 결국 2월이 되면서 1천만 달러 선까지 하락한 것임.

지난 1월 북한이 중국에 가장 많이 판매한 품목은 ‘토석류와 소금(HS 25)’으로 수출액수가 전년도 대비 455% 증가한 1천7만달러로 나타남. 뒤이어 ‘채소류(HS 07)’와 ‘과실 및 견과류(HS 08)’의 수출이 많았음. 채소류(HS07)의 경우 1월 대중 수출 총액은 475만4천 371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천84% 증가하였고, ‘과실과 견과류(08)’의 총액은 431만 3천 828달러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1천67%의 증가하였음.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산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자 또 다른 식량인 채소와 과실, 견과류가 이 자리를 대체하는

듯한 현상이라는 분석임. 그밖에 ‘목재와 목탄(HS코드 44’과 ‘철강(HS코드 72)’이 상위 수출 4,5위 품목으로 집계되었음.

북한 외화벌이 위해 인력수출 모색

북한 인력수출 회사들이 중국의 사업주들에게 북한 노동자 고용을 부탁하는 것으로 알려짐. 소식통은 중국 당국의 제재로 현재 중국에 남아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모두 철수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소수인원이라도 고용해달라는 부탁전화를 자주 받는다고 설명하였음. 과거에는 최소 50명 이상을 고용해야 북한 인력수출회사에 명함을 내밀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단 5~6명만 고용해도 북한 측에서 감지되지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북한은 대북제재로 해외인력 수출이 모두 막혀 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린 상태이며 이러한 상황을 살펴볼 때 현재 북한의 외화사정이 매우 급한 것 아니냐는 의견임.

실제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해외 노동자 파견이 제한되자 중국에서 돈을 벌어 올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외화벌이를 위한 사시여행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뿐만 아니라 최근연간 무역과제가 하달되어 무역기관 간부들을 대거 외국에 내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일꾼들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와 아프리카 등으로 파견되며 회사와 무역업종,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인당 매달 평균 500~700달러의 외화과제를 내린 것으로 전해짐.

<북러무역>

연합뉴스(3.20, 3.21), 매일경제(3.21, 3.27), VOA(3.27)

북한-러시아 경제협력 추진

지난 21일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정부 경제대표단은 평양을 방문하여 제8차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였음. 러시아 측에서는 극동개발부 외에 농업부, 에너지부, 노동부 등 11개 연방정부 기관 대표와 지방정부 대표, 기업인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짐. 북한과 러시아는 에너지·농업·인프라 건설 분야 등의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고, 회의 결과를 담은 의정서에 조인한 것으로 알려짐. 같은 날 칼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로두철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만나 북러간 무역을 위한 자동차 도로 건설 문제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던 것으로 알려짐. 이번 북러간 경제협력회의는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개최가 된 만큼 이를 통해 러시아는

존재감을 과시하고, 북한은 국제사회의 압력이 높아진 가운데 러시아의 경제협력 강화를 돌파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음.

러, 북한과 2억6천만 달러 교역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 간 공식무역액은 연간 8천만 달러이지만 불법 유류를 포함한 비공식 무역액은 2억6천만달러 상당이라고 지적했음. 또한 러시아에 있는 북한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보내는 돈이 연간 1억 5천만 달러에서 3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음. 이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모든 회원국들이 유엔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기대하였고, 특히 북러 사이에 무역거래를 위한 교량 건설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하였음.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VOA(3.1), 뉴스1(3.22)

아래 표는 3월 한 달 간 언론에 소개된 대북지원 소식 목록임.

단체 (국가명)	지원일	지원품	지원액 혹은 지원량	비고
컨선 월드와이드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2018년(계획)	지원사업	식수, 위생사업 200만 달러 규모	지난해보다 40% 예산 증 가되었으며 북한 주민 9만 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임.
유진벨재단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2018년 5월1일 - 5월 22일(계획)	결핵약 기타 지원물품	결핵약 등 의료물품 전달	다제내성 결핵 센터 12곳 을 방문해 결핵약과 기타 지원물품을 전달할 예정임.

정리 | KDI 북한경제연구부

기사 원문 리스트

- [2018.3.01] 아일랜드 NGO, 올해 200만 달러 규모 대북 지원 (VOA)
- [2018.3.02] 북 인사들, 중국 지인에 전화해 노동자 고용요청 (RFA)
- [2018.3.02] 미국 재무부, 대북 독자제재 규정 수정안 발표 (연합뉴스)
- [2018.3.02] 미 재무부, 대북제재 이행 규정 개정...압박 의지 구체화 (VOA)
- [2018.3.03] “北 인력송출회사, 中사업주에 노동자 고용 부탁” (뉴스1)
- [2018.3.05] “北 무역기관 간부들 다시 외국에 보내 외화벌이 독려” (RFA)
- [2018.3.05] FAO, 2018에도 북 ‘식량부족국가’로 재지정 (RFA)
- [2018.3.06] “북, 1월 대중국 수출액 작년 동기대비 5분의 1” (연합뉴스)
- [2018.3.07] “개인토지 매매 수익 50% 당 자금으로...암 거래 눈감아줘” (데일리NK)
- [2018.3.12] “북한에서 사용·개발 중인 전자카드 20여 종” (RFA)
- [2018.3.13] 北, 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지원중단에 항의 편지 (연합뉴스)
- [2018.3.14] 미국 대북제재 해제, 트럼프 대통령도 마음대로 못한다 (뉴데일리)
- [2018.3.15] 평양도 저출산 고령화 시대 접어들나 (중앙일보)
- [2018.3.16] 세계기금 “북한이 훨씬 높은 투명성 보장해야 지원 재개 가능” (VOA)
- [2018.3.17] “북한, 파키스탄서도 외교공관 불법 임대” (VOA)
- [2018.3.17] 유엔 안보리 “북한, 원산지 위조·환적 등으로 석탄수출 제재 회피” (뉴데일리)
- [2018.3.17] 유엔 보고서 “북한, 파키스탄서도 외교공관 불법 임대 (중앙일보)
- [2018.3.20] 미 해안경비대, 북 선박 218척 감시 중 (VOA)
- [2018.3.20] 베트남 “북한과 교역 일시 중단...노동자 허가도 안 해” (VOA)
- [2018.3.20] 벨기에 NGO “북, 인도주의 접근성 최악” (VOA)
- [2018.3.20] 올해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보고서, 각종 위반 사례 충실히 담야 (VOA)
- [2018.3.20]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1년 연장 (중앙일보)
- [2018.3.20] 러시아 극동개발장관, 정부 경제대표단 이끌고 방북 (연합뉴스)
- [2018.3.21] 러시아 정부 대표단, 북한과의 경제협력위 회의 참석차 방북 (연합뉴스)
- [2018.3.21] 북한-러시아, 경제협력추 의정서 조인 (매일경제)
- [2018.3.22] 유진벨재단, 5월 북한 간다... 결핵약 등 지원물품 전달 (뉴스1)
- [2018.3.27] 美 국무부 “북러 간 비공식 무역액 年 2억6천만 달러” (매일경제)
- [2018.3.27] 국무부 “러 대북 비공식무역 2억6천만달러 상당...제재 이행해야” (VOA)
- [2018.3.27] IFRC “예산 감소된 채 북 수해 복구 사업 완료” (RFA)
- [2018.3.27] 싱가포르 “북한인 노동허가 모두 취소...신규 발급도 중단” (VOA)
- [2018.3.28] 북한 대중 수출액 1천만 달러 아래로...2001년 수준으로 후퇴 (VOA)

- [2018.3.28] 미국, 北엔 "제재 계속"... 中엔 "압박 흐트러뜨리지 말라" (조선일보)
- [2018.3.28] "싱가포르 정부, 북한인 노동허가 모두 취소" (중앙일보)
- [2018.2.28] 유엔 보고서 "북한, 시리아에 탄도미사일-화학무기 기술 이전" (VOA)
- [2018.3.29] 네덜란드-불가리아, 유엔 대북결의 이행보고서 공개...회원국들 제출 속도 빨라져 (VOA)
- [2018.3.29] 트럼프 집권 후 미·북 교역 '0' (VOA)
- [2018.3.29] 폴란드 "북한대사관 '불법임대 사업' 중단 추가 요구" (VOA)
- [2018.3.29] 北, 내부 정보 유출 강력 경고... "쌀값 말해주면 종신행" (DailyNK)
- [2018.3.30] "유엔, 북 관련 선박 27척·기업 21곳·기업인 1명 제재" (RFA)
- [2018.3.31] 유엔, 北 긴급기금지원 첫 중단... "제재로 송금 안돼" (동아일보)
- [2018.3.31] 유엔, 대북 긴급구호기금 지원 11년만에 중단 (중앙일보)
- [2018.3.31] 유엔, 대북 긴급기금 지원 중단... "제재로 송금 길 막혀" (VOA)
- [2018.4.01] 미국 "유엔 안보리 역대 최대 대북제재, 북한압박에 대한 지지" (뉴데일리)